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민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것이 광고다. 광고가 없다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릴 수 없고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광고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변인이다.

광고행위에는 고도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제품 정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광고로 소비자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침내는 소비자의 불신을 촉발해 생산과 소비의 고리가 끊긴다. 광고를 광고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광고는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차자와 피치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론매체라면 그 언론매체의 존립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광고다. 광고가 없다면 저렴한 대중매체는 존재할 수 없고, 그럴 경우 국가는 상의 하달과 하의 상달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광고의 이런 오묘한 원리 때문에 광고주의 광고 판매에도 책임과 윤리가 따른다. 광고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매체를 선별한다면 매체 역시 역시 광고주에 대한 보도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광고

사자와 소비자, 차자와 피치자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광고가 광고주 자의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88년 9월에 광고주협회 창립을 사실상 주도해 독자성을 보장한 것은 매우 혁명한 일이었다. 또한, 광고주협회가 그동안 창설 목적에 맞게 나름대로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으로 광고주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 응징의 차원에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설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스스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일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이라면 광고주협회에 대한 자질구레한 간여는 접어야 한다.

정부가 전경련을 부추겨 광고주협회를 위축시키거나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와는 맞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다시 1988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전경련 최고 책임자들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를 전하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고 있다. 광고주협회의 자율성을 무시하여 광고주협회를 경제인연합회 직속기구로 환원하고 경제인단체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광고주협회 회장을 맡게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어느 신문은 전경련의 이런 조치가 정부의 사주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광고주협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광고주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 대해 응징의 차원에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설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할 때 스스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일은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이라면 광고주협회에 대한 자질구레한 간여는 접어야 한다.

정부가 전경련을 부추겨 광고주협회를 위축시키거나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와는 맞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다. 다시 1988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전경련 최고 책임자들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를 전하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주협회를 손대서는 안 된다

주가 매체를 차별대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특정 매체에 타격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메커니즘 자체가 훈들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기반까지도 위협한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감안하면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광고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지만 광고주의 사업에만 집착하기보다 광고성을 헤아려야 한다.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거시적인 혜안을 가지고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

자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가 좋은 광고상’ 시상제도를 만들어 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고주협회는 또한 환경부와 함께 ‘환경상’을 만들어 시장화 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광고주협회는 광고주의 사업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광고주와 소비자를 아우르고, 아울러 환경문제까지도 숙고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그런 일은 궁극적으로 광고주인 경제인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그 광고주협회가 빠각거리

기고

정병재



미국 리처드 올리버 교수는 바이오테크(생물공학)는 다가오는 제4의 물결로 ‘바이오테크 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모든 기업이 바이오피기 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테크가 미래 지구촌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단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바이오테크놀리지를 소재로 한 영화로는 쥬라기 공원, 가타카, 스파이더맨, 엑스맨, 스피시즈, 6번째 날(The 6th

으로 큰 혼란 없이 위기를 넘긴바 있다. 화순 녹십자는 계절 독감 백신, 신종플루 백신, 결핵 백신 등 백신산업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 초에 신종플루 백신 생산방식을 유정란 배양백신에 세포배양방식과 병행하는 화순공장 증설계획을 발표했다. 세포배양방식은 Pandemic(대유행)에 대비한 대량생산을 위해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화순 의약산단 내에 동물을 이용한 국내 최고 전임상

전남의 미래, 바이오산업이 대안이다

Day) 등이 있다.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농작물의 병해충 자체방제가 가능한 맞춤형 작물 재배를 위한 유전자 변형작물(GMO) 개발, 치료용 줄기 세포 복제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실제 우리 생활속을 과고하고 있다. 영화 속의 공상 이야기가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우리 전남은 농수산자원이 풍부해 생물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02년 8월에 전남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이후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 화순 생물의약연구센터, 장성 나노 바이오연구센터, 곡성 생물방제센터, 원도 해양바이오 산업센터, 장흥 천연 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등 7개 특화센터를 구축해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산업 지원 인프라를 보유하고 100여 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생물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화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화순 녹십자사에서 신종플루 백신 3,000만 도즈를 생산·보급해 전국적

시험 평가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산하 ‘김포 안전성 평가본부(GLP)’ 유치가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KTR 김포 안전성 평가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전남의 식품, 천연자원 추출물, 바이오의약 등 1,000여 개 기업을 포함한 호남권 3,000여 개 기업이 품질인증과 해외수출을 위한 해외 시험인증 등을 전남에서 할 수 있어 권역 내 바이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3대 연구기관 중 하나인 생물의약 분야 연구기관인 독일 프리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화순은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백신산업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산업은 당장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분야이다. 바이오(생물)산업 육성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전남의 미래 대안으로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면 생물산업이 전남도의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경제과학국장〉

자전거 도난방지·이용 활성화 위해 등록제 도입 서둘러야

자전거마다 고유한 차대번호(Serial Number)를 등록하는 제도다. 구청에서는 접수된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전거 이용률을 파악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종고 자전거를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차대번호 조회를 소유자 확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부 구청이나 자치단체가 시행 중이지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훔친 자전거를 되찾거나 인계받을 수 있게 한다.

▲김정환·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동

파출소 전환 인력부족 지역경찰서 지원근무로 해결

광주 경찰은 지난 1월 기준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전환했다. 13개 지구대가 폐지되고 26개 파출소가 신설됐다. 이 때문에 파출소 순찰 인력 현상이 발생했다. 따라서 광주 경찰은 부족한 순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및 5개 경찰서 소속 내근 직원 1천600여 명이 지구대 7개 소와 파출소 27개소에 치안수요가 집중되는 야간시간대에 2~4명씩 배치돼 지역경

찰과 함께 도보순찰 및 112 순찰을 하는 지원근무를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지원 근무제도는 파출소와 경찰서 간의 업무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근무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파출소 직원뿐 아니라 치안력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김정환·광주 남부경찰서 백운지동

시설

5·18 30주년 행사 가치 재정립 계기돼야

5·18 30주년 기념행사가 모례부터 본격적으로 닦을 올린다. 올해 기념행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한 세대를 맞은 역사적 의미와 민주·자유정신의 가치가 절실히 시대적 의미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를 수밖에 없다.

기념행사위원회가 정한 5·18 30주년 행사 슬로건은 ‘들리는 오월의 함성, 보이는 민중의 횃불’이다. 결국, 5·18 민중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오월정신 계승, 그리고 시민참여가 이번 5·18 기념 행사의 핵심인 것이다.

5·18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많이 바뀌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민주주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건으로 ‘광주민주화운동(28.9%)’, ‘4·19’(26.3%), 등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해방 이후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민주화운동 역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60년 4·19 혁명

80년 역사의 노안·고막원驛 폐쇄 안 된다

80년 동안 나주 지역 주민들의 운송 수단이 돼온 노안역과 고막원역이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에 따르면 노안역과 고막원역이 2000년대 들어 열차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어 오는 7월부터 폐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노안역의 경우 하루 평균 열차 이용객이 2006년 7명에서 2007년~2008년 1명, 2009년에는 0.8명으로 줄어들고, 고막원역은 2006년 13명에서 2007년~2008년 6명, 2009년 5.7명으로 감소해 사실상 역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 측은 노안역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열차 이용객은 하루 한 명도 안 되는 만큼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역 폐쇄가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며 철도공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나주 혁신 도시와 광주도시철도 연계 등 장기적

無等鼓

지난달 29일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건 발생 한 달 이 지나 전 국민의 애도 속에 희생자들의 장례가 끝났지만 사건의 전말은 아직 아리송하다.

조계함이 둘로 잘려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것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일이다. 이 같은 미증유의 사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번 사건 초기부터 ▲

암초 충돌 ▲선체의 파로 파괴 ▲북한의 원인제공설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

특히 정부는 북한 원인제공에 대해 초기부터 매우 신중했다.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불리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폭발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알루미늄 금속 파편과 플라스틱 파편이 발견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천안함에서 수거한 알루미늄 파편 4개와 플라스틱 파편을 놓고 일부에서 북한의 명백한 증거된다.

단 1mm에 불과한 지라도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 건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데 놀랄 만큼 변수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천안함 사건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석기경 사회부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論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551 | 저자·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 | 사 회 2 부 2200-692 |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문 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4918〉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0-651〉

면 접 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치 부 2200-634 | 여론분석부 2200-679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 체 육 팀 2200-663 | 디자인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5 |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2 | 사 전 부 2200-691 | 〈F A X 222-4267〉 | 〈F A X 222-4267〉 |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